

가계금융복지조사(2010~2020)

가구소득 및 재무구조 변화 분석

⑤순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1. 12. 22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경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2-2670-9221 팩스: 02-2670-9299 이메일: kctu-li@nodong.org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	1
1. 들어가며	7
2. 순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1) 가구소득 및 지출 관련 변화	10
2) 가구 재무(자산 & 부채)상태 변화	28
3) 가구 재무건전성 추이	35
3. 나가며	40

요약

본 보고서는 통계청,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 우리나라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가 지난 11년간(2010~2020년)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분석한 것이다. 1차 보고서 ‘전체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총괄’은 전체 가구소득 및 재무 항목들의 평균과 중앙값을 활용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2차와 3차 보고서는 가구주 특성별(성별, 종사상지위, 교육 정도, 연령대)로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했었다.

4차 보고서는 가구 특성 중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소득 최하위 20% 가구인 소득 1분위는 2012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적자재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게다가 소득 1분위 가구의 주거비, 의료비 등 필수 경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는데, 1분위 가구에 특화된 가정 경제 안정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교육비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학력별 소득 격차를 고려할 때 소득 불평등 개선과 더불어 무상 교육 등 공교육 체계를 대학까지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넷째, 현행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소득세제 및 정부 지원금 등)의 효과가 불분명한 보이는데, 저소득 가구의 의료, 주거, 식품 등 기본권적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대적 수술이 필요해 보였다.

이번 보고서는 가구 특성 중 ‘순자산 5분위별’ 소득 및 재무상태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그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볼 예정이다.

순자산 5분위별 가구원 수 감소율은 하위 분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었으며, 상위 분위로 갈수록 평균 가구원 수도 더 많았는데, 2020년 기준 평균 가구원 수는 1분위(2.0명), 2분위(2.4명), 3분위(2.8명), 4분위(3.0명), 5분위(3.1명) 등이었다. 가구주 평균연령은 1분위(57.9세), 2분위(55.6세), 3분위(54.9세), 4분위(55.3세), 5분위(56.7세) 등으로 큰 편차는 없게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순자산 5분위별 경상소득 증가율은, 5분위 가구가 61.80%(6,541→10,583만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 3분위 57.18%(3,416→5,368만원), 4분위 57.01%(4,454→6,993만원), 2분위 54.47%(2,565→3,961만원), 1분위 43.66%(1,888→2,713만원) 등으로 순차

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위 분위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소비지출 증가율을 보면, 5분위 가구가 69.52%(1,444→2,448만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 4분위 55.82%(822→1,280만원), 3분위 47.54%(607→896만원), 2분위 35.78%(415→563만원) 등이었으며, 1분위 가구 2020년 비소비지출은 341만원으로 2010년과 변화가 없었다.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또한 5분위 가구가 59.61%(5,097→8,135만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 3분위 59.27%(2,808→4,473만원), 2분위 58.08%(2,150→3,399만원), 4분위 57.28%(3,632→5,713만원) 등으로 나타났고, 1분위 가구는 비소비지출이 늘지 않았음에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53.28%(1,548→2,372만원)로 가장 낮았다.

보유 순자산과 소득액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세전·세후 모두 가장 높았고, 보유 순자산과 소득액이 가장 적은 1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가장 낮았던 결과, 순자산 5분위별 소득 불평등은 조금도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5분위별 가구 집단 간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순자산 5분위 가구 대비 분위별 소득 비중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2010년과 비교할 때 1~4분위 가구 모두 경상소득은 물론 처분가능소득 비중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전체 가구 평균소득 대비 분위별 소득 비중 또한 순자산 5분위별 가구 집단 간 소득 불평등이 여전한함을 잘 보여준다. 5분위 가구는 전체 가구 평균 대비 경상소득 비중(173.36→178.64%)은 물론 처분가능소득 비중(167.27→168.84%) 모두 기준연도 대비 늘어났다. 하지만 1분위 가구는 경상소득 비중(50.05→45.79%)은 물론 처분가능소득 비중(50.78%→49.23%) 모두 하락했다.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변화를 보면, 위의 비교 시점(2010~2020년)과는 달리 순자산 1분위의 소득증가율이 48.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사업소득(증가율 39.42%, 순증액 122만원)과 공적이전소득(173.00%, 284만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소득원천 중 노동소득 증가율은 5분위 가구가 49.22%로 가장 높았고, 1분위 가구는 35.65%로 가장 낮았다. 노동소득 순증액은 5분위 가구가 2,064만원(4,194→6,25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1분위 가구는 441만원(1,237→1,678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사업소득의 경우 저소득 가구일수록 증가율이 높았는데, 1분위가 39.42%(309→431만원)로 가장 높았고, 5분위 가구는 -14.97%(2,544→2,172만원)로 역성장을 보였다.

순자산 5분위별 가구 모두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이 두드러졌는데, 재산소득 순증액을 보면, 5분위 가구가 713만원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이어 4분위(228만원), 3분위(116만원), 2분위(62만원), 1분위(20만원) 등이었다. 공적이전소득 순증액은 5분위 324만원(284→608만

원), 1분위 284만원(164→448만원), 4분위 273만원(180→453만원), 2분위 261만원(126→387만원), 3분위 243만원(148→391만원) 등이었다.

5분위 가구의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이 특히 많이 늘어난 결과, 5분위와 1분위 가구 간의 노동소득 격차를 보면, 2012년 2,957만원에서 2020년 4,580만원까지 추세적으로 확대되었다. 재산소득 격차 또한 2012년 738만원에서 2020년 1,431만원으로 급등하였다.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이 5분위와 1분위 가구 간의 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5분위 가구 재산소득은 특히 2017년 단기 급등하였는데, 주택가격 급등세가 2016년에 시작되었음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승이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5분위 가구 재산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소비지출증가율은 1분위(25.10%), 2분위(23.87%), 3분위(23.55%), 4분위(17.32%), 5분위(12.05%) 등으로, 순자산이 적을수록 소비지출증가율은 더 높았다. 순자산 5분위별 가구 집단 모두 식료품, 주거비, 의료비 지출은 증가했고, 교육비 지출은 줄었다. 교통비나 통신비의 경우 1분위 가구는 늘었지만, 5분위 가구는 줄었다.

5분위 가구는 식료품비 순증액이 2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58만원)와 주거비(15만원)도 늘었지만, 교육비(-83만원)와 교통비(-50만원), 통신비(-5만원) 등은 줄었다.

1분위 가구는 교육비(-21만원)만 줄고, 식료품(123만원), 의료비(45만원), 주거비(41만원), 교통비(14만원), 통신비(10만원) 등 모두 늘었다.

가구당 식료품비 증가율은 1분위(31.95%), 2분위(32.73%), 3분위(31.17%), 4분위(26.79%), 5분위(24.71%) 등으로, 1~3분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인당 식료품비 증가율은 1분위(45.14%), 2분위(43.79%), 3분위(40.54%) 4분위(39.47%), 5분위(32.76%) 등으로 순자산이 적은 분위일수록 증가율이 높았다.

2020년 기준 가구당 주거비는 5분위가 39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분위(328만원), 4분위(321만원), 3분위(286만원), 2분위(278만원)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1인당 주거비를 산출하면, 1분위가 16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분위(128만원), 2분위(116만원), 4분위(107만원), 3분위(102만원)의 순이었다.

2020년 기준 순자산 5분위별 가구당 교육비는, 5분위가 5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분위(423만원), 3분위(289만원), 2분위(173만원), 1분위(96만원)의 순으로 순자산이 많을수록 교육비 지출도 많았다. 1인당 교육비 또한 5분위(189만원), 4분위(141만원), 3분위(103만원), 2분위(72만원), 1분위(48만원) 가구 등으로 위계가 분명하게 나타나, 순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교육비 투입량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순자산 분위별 가구주 평균연령이

1분위(57.9세), 2분위(55.6세), 3분위(54.9세), 4분위(55.3세), 5분위(56.7세) 등으로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비슷한 연령대의 학령기 자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학력별 소득 및 자산 격차가 매우 큰 우리 사회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의 자산 불평등이 미래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2020년 가구당 의료비는, 5분위(267만원), 4분위(203만원), 3분위(187만원), 2분위(147만원), 1분위(116만원) 등으로, 순자산이 많은 상위 분위일수록 의료비 지출도 많았다. 분위별 가구원 수를 반영한 1인당 의료비 또한 5분위(86만원), 4분위(68만원), 3분위(67만원), 2분위(61만원), 1분위(58만원) 등으로 위계가 분명했다.

소득에서 총지출(소비지출+비소비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 저축가능액 추이를 보면,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저축가능액 순증액은 5분위 1,510만원(2,534→4,044만원), 4분위 1,159만원(1,371→2,530만원), 3분위 835만원(988→1,823만원), 2분위 603만원(683→1,286만원), 1분위 455만원(292→747만원) 등이었다. 증가율로 보면 1분위가 155.70%로 가장 높았는데, 기준액이 작아 발생하는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순자산 5분위별 저축가능액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5분위의 경우 2012에는 20년이 걸렸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2020년에는 25.8년이 필요했다. 그밖에 2020년 기준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저축하기 위한 소요 기간은 4분위(41.2년), 3분위(57.2년), 2분위(81.1년), 5분위(139.7년) 등으로, 무주택이면서 기존에 저축한 자금이 없다면 사실상 서울에서 주택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020년 기준 자산총액은 5분위(131,482만원), 4분위(47,683만원), 3분위(26,881만원), 2분위(13,068만원), 1분위(3,579만원) 등으로, 5분위 자산은 1분위 자산의 36.7배에 달하는 등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였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총자산 순증액 또한 5분위 가구가 44,59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분위(19,836만원), 3분위(12,222만원), 2분위(6,355만원), 1분위(1,297만원) 등이었다. 5분위 가구 순증액은 1분위 가구 순증액의 34.4배에 달했다.

2020년 기준 실물자산 비중은 5분위(80.57%), 4분위(76.64%), 3분위(69.56%), 2분위(57.70%), 1분위(40.61%) 등의 순으로, 순자산이 많을수록 실물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자산 순증액 또한 많았다. 1분위 가구의 실물자산 비중은 불과 40.61%로 금융자산 비중 59.39%보다 더 낮았는데, 자산 및 순자산 순증액은 1,297만원과 888만원으로 5분위 가구 순증액의 2.4%와 2.9% 수준에 머물렀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부채 순증액 또한 실물자산 비중이 높을수록 많았다. 5분위 가구

부채 순증액은 7,404만원(11,597→19,0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분위 4,275만원(4,635→8,910만원), 3분위 3,595만원(2,793→6,388만원), 2분위 2,508만원(1,568→4,076만원), 1분위 407만원(2,496→2,903만원) 등이었다. 2020년 기준 전체 가구 평균부채 대비 분위별 비중은 5분위(230.15%), 4분위(107.92%), 3분위(77.37%), 2분위(49.37%), 1분위(35.16%) 등으로, 5분위 부채가 다른 분위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채 및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 보유 가구 분포 추이를 보면, 2020년 기준 순자산 5분위 가구는 부채(73.6%), 금융부채(57.3%), 임대보증금 부채(42.0%)의 가구 분포를 보였다. 그런데 5분위 임대보증금 보유 가구 분포 42.0%는 4분위(20.6%), 3분위(11.1%), 2분위(5.1%), 1분위(0.9%) 가구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5분위 가구의 상당수가 본인 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부채증가율도 높은 편이었지만, 원리금상환액 증가율도 1분위(58.07%), 2분위(135.62%), 3분위(170.89%), 4분위(147.91%), 5분위(155.43%) 등으로, 2분위 가구를 제외하고는 부채증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원리금상환액은 5분위(2,121만원), 4분위(1,308만원), 3분위(1,191만원), 2분위(759만원), 1분위(556만원) 등으로 가계의 유동성을 악화하고, 소비지출을 자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기준 순자산 5분위별 순자산액은 5분위(112,481만원), 4분위(38,773만원), 3분위(20,493만원), 2분위(8,992만원), 1분위(675만원) 등으로, 5분위 가구 순자산은 1분위 가구 순자산의 166.6배에 달했다. 5분위 자산총액(131,482만원)이 1분위 자산총액(3,579만원)의 36.7배에 달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산 불평등보다 순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한 상태였다.

순자산 5분위별 ‘자산 5분위 배율’의 경우, 2012년 42.3배에서 2020년 36.7배로 줄어들면서 다소나마 개선되는 모습이었지만, ‘순자산 5분위 배율’의 경우 2012년 181.4배에서 2020년 166.5배로, 기준연도와 비교할 때 낮아지긴 했지만, 2017년 99.7%를 기록한 이후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2020년 166.5배까지 급등하였다.

순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한 이유로는, 첫째 5분위와 1분위 가구 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 둘째 실물자산 비중과 부채 규모가 높았던 5분위 가구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보유 자산 가치가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20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5분위 가구가 233.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4분위(155.96%), 3분위(142.83%), 1분위(122.39%), 2분위(119.94%)의 순이었다. 5분위 가구의 경우 2010년에도 227.52%로 매우 높은 상태였는데, 지난 10년간 줄어들기는커녕 6.05%p나 더 상승했는데, 대출 금리상승이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5분위 가구의 유동성 위험이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1분위는 2010년 161.26%에서 2020년 122.39%로 -38.87%p 하락했지만, 보유 순자산이 적어 담보력이 취약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상존한다. 소득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경제 상황 악화 시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1분위 가구의 부채증가율은 16.31%로 가장 낮았음에도,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가장 높았다.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12년 398.52%에서 2020년 429.80%로 31.28%p나 상승했고, 2020년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또한 1분위 가구가 131.75%로 가장 높았다. 1분위 가구의 경우 부채액도 가장 적고, 부채증가율이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보유 자산이 너무 적기 때문이었다. 경제 상황 악화 시 1분위 가구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질 것으로,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번 보고서는 순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했는데, 주요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 특히 순자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2017년 이후 ‘순자산 5분위 배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수혜자는 순자산 5분위 가구였다.

둘째,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경상소득은 물론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모두 순자산 5분위 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소득 재분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교육비 불평등 또한 매우 심각한 상태로 학력별 소득 및 자산 격차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의 불평등이 미래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넷째, 소득원천 중 순자산 5분위 가구의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이 특히 많이 늘어난바, 5분위와 1분위 가구 간 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다섯째, 1분위 가구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 상황 악화 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질 것으로,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들어가며

본 보고서는 통계청,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 우리나라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가 지난 11년간(2010~2020년)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분석한 것이다. 1차 보고서 ‘전체 가구소득 및 재무구조 변화 총괄’은 전체 가구소득 및 재무 항목들의 평균과 중앙값을 활용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2차와 3차 보고서는 가구주 특성별(성별, 종사상지위, 교육 정도, 연령대)로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했었다. 4차 보고서는 가구 특성 중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소득 최하위 20% 가구인 소득 1분위는 2012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적자재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2012년 1분위 가구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상소득은 761만원, 총지출액은 822만원(소비지출 744만원 + 비소비지출 78만원)으로 -61만원 적자상태였다. 이후 등락은 있었지만 단 한 해도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2020년 경상소득은 1,155만원, 총지출액은 1,197만원(소비지출 1,050만원 + 비소비지출 147만원)으로 적자액은 -42만원이었다.

둘째, 1분위 가구의 주거비, 의료비 등 필수 경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는데, 1분위 가구에 특화된 가정 경제 안정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 분위별 1인당 주거비를 산출해보면, 2020년 기준 1분위 가구가 14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분위 가구는 14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3분위(119만원), 5분위(117만원), 4분위(107만원)의 순이었다. 1인당 의료비 또한 1분위 가구가 9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분위(77만원), 5분위(69만원), 4분위(63만원), 3분위(59만원) 등의 순이었다.

셋째, 교육비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학력별 소득 격차를 고려할 때 소득 불평등 개선과 더불어 무상 교육 등 공교육 체계를 대학까지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0년 기준 교육비 지출액은 5분위 가구가 79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4분위(422만원), 3분위(239만원), 2분위(93만원), 1분위(22만원) 등으로 분위 간 위계가 확실하게 나타났는데, 1인당 교육비 또한 5분위(220만원), 4분위(128만원), 3분위(85만원), 2분위(44만원), 1분위(16만원) 등으로 다른 비목별 지출과는 달리 분위 간 위계가 확실했다. 학력별 소득 격차가 매우 심한 우리 사회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의 소득 불평등이 미래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넷째, 현행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소득세제 및 정부 지원금 등)의 효과가 불분명한 보이는 바, 전면 제검토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의료, 주거, 식품 등 기본권적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대적 수술이 필요해 보였다.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효과가 불분명함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①소득 최하위 1분위 가구보다 소득 차상위 가구인 4분위에서 세후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고 ②1분위와 5분위 가구 간 소득 격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었으며 ③지난 10년간 전체 가구 평균소득 대비 분위별 소득 비중 변화를 보면 세후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었다.

위와 같이 지난 4차 보고서는 가구 특성 중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했는데, 이번 보고서는 가구 특성 중 ‘순자산 5분위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할 예정이다.

- 가계금융복지조사(2010~2020) 분석보고서 이용 시 유의할 점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 단위는 경제적 가족¹⁾으로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단위²⁾와는 조사 및 분석단위가 다르다. 가계금융조사(2010~2011년)의 표본은 1만 가구였으며, 2012년 이후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의 2만 가구이다. 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까지 포함하여 산출한 전체 가구 통계와 보유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보유 가구 통계가 있다.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각 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총계가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평가 방법은 조사기준 당시의 시가(시장가격)로 조사되었다. 2018년부터 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비소비지출은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와 면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새롭게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에 사용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가구소득 및 재무(자산&부채) 관련 모든 시계열 자료는 저자가 매년 발표되는 통계청 보고서와 통계표를 가지고 복원한 자료이다. 통계청 홈페이지의 경우 관련 통계는 가계금융조사(2010~2011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7년 이후)로 시계열이 구획되어 제공되고 있다. 조사항목이나 방법의 변화에 따라 시계열이 구획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동일 목적으로 조사된 동일 조사항목의 경우 2010년부터 2020년간의 시계열 분석을 수행함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모든 연도는 기본적으로 조사연도를 의미한다. 실제 통계에서의 자산 및 부채 관련 항목들은 각 조사연도 3월말 기준(2010년만 2월말 기준) 자료이며, 소득 관련 항목들은

조사 전년도 기준 자료이다. 예를 들어 2020년으로 표기된 각 소득 및 지출 관련 데이터는 2019년 소득 및 지출(2019년 1월~12월)을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 중 일부는 2012년부터 제공되고 있어, 해당 항목의 경우 본 보고서 또한 2012년 이후로 시계열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제공되고 있는 주요 데이터로는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비목별 소비지출 내역, 비목별 비소비지출 내역' 등이 있다.

- 1) 1인 가구 및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맺어져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을 의미. 취업이나 학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외지에 거주하는 가족은 포함. 함께 살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친인척, 동거인이나 시설에 장기간(12개월 이상) 거주하는 가족은 제외함.
- 2) 취업, 학업, 의무복무 등으로 일시적으로 외지에 거주하는 가족은 제외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비혈연 동거가구원은 포함

2. 순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³⁾

1) 가구소득 및 지출 관련 변화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순자산 5분위⁴⁾ 평균 가구원 수 변화를 보면, 보유 순자산이 적은 1분위와 2분위의 감소율이 상위 분위보다 더 높았다. 순자산 1분위의 가구원 수 감소율은 -11.3%(2.2→2.0명), 2분위는 -11.2%(2.7→2.4명)였으며, 4분위는 -9.1%(3.3→3.0명), 5분위는 -8.8%(3.4→3.1명)였다. 3분위는 -7.5%(3.0→2.8명)로 가구원이 가장 적게 줄었다. 2020년 기준 가구원 수는 순자산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가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 5분위별 가구주 평균연령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높았는데, 순자산 5분위별 가구주 평균연령은 보유 순자산 규모와는 별 상관이 없었다. 2020년 기준 순자산 분위별 가구주 평균연령은 1분위(57.9세), 2분위(55.6세), 3분위(54.9세), 4분위(55.3세), 5분위(56.7세) 등이었다.

[그림1] 순자산 5분위별 가구원 수 및 가구주 평균연령 변화

(단위 : 명, %, 세)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순자산 5분위별 경상소득 증가율은, 5분위 가구가 61.80%(6,541→10,583만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 3분위 57.18%(3,416→5,368만원), 4분위 57.01%(4,454→6,993만원), 2분위 54.47%(2,565→3,961만원), 1분위 43.66%(1,888→2,713만원) 등이었다. 순자산이 많은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순자산을 가장 적게 보유한 1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 또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본 보고서에서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소득 및 지출, 자산 및 부채 관련 수치는 모두 전체 가구 평균값이다. 중앙값을 사용한 경우 별도로 중앙값임을 표기하였다.

4) 순자산 5분위는 보유 순자산을 5구간으로 나누어 분류한 계층별 분류다. 5분위는 최상위 20%, 4분위는 상위 60~80%, 3분위는 상위 40~60%, 2분위는 하위 20~40%, 1분위는 최하위 20%를 나타낸다.

해당 기간 경상소득 순증액은 5분위(4,042만원), 4분위(2,539만원), 3분위(1,953만원), 2분위(1,397만원), 1분위(824만원) 등으로, 5분위 소득 순증액은 1분위의 4.9배에 달했다.

[표1] 순자산 5분위별 경상소득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만원, %)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액	증가율	소득액	증가율	소득액	증가율	소득액	증가율	소득액	증가율
2010	1,888	-	2,565	-	3,416	-	4,454	-	6,541	-
2011	1,840	-2.55	2,761	7.65	3,574	4.63	4,632	3.99	7,250	10.84
2012	1,823	-0.93	2,806	1.64	3,725	4.23	4,970	7.30	7,843	8.18
2013	1,974	8.28	2,968	5.77	3,971	6.60	5,280	6.24	8,198	4.53
2014	2,030	2.84	3,125	5.29	4,192	5.57	5,589	5.85	8,356	1.93
2015	2,136	5.22	3,275	4.80	4,293	2.41	5,738	2.67	8,405	0.59
2016	2,160	1.12	3,295	0.61	4,416	2.87	5,908	2.96	8,629	2.67
2017	2,412	11.67	3,666	11.26	4,893	10.80	6,425	8.75	9,994	15.82
2018	2,536	5.14	3,774	2.95	5,063	3.47	6,743	4.95	10,409	4.15
2019	2,571	1.38	3,897	3.26	5,256	3.81	6,869	1.87	10,544	1.30
2020	2,713	5.51	3,961	1.65	5,368	2.14	6,993	1.81	10,583	0.37
증감액	824		1,397		1,953		2,539		4,042	
증가율	43.66		54.47		57.18		57.01		61.80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순자산 5분위별 비소비지출⁵⁾ 증가율을 보면, 5분위 가구가 69.52%(1,444→2,448만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 4분위 55.82%(822→1,280만원), 3분위 47.54%(607→896만원), 2분위 35.78%(415→563만원) 등이었으며, 1분위 가구 2020년 비소비지출은 341만원으로 2010년과 변함이 없었다.

[표2] 순자산 5분위별 비소비지출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만원, %)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지출액	증가율	지출액	증가율	지출액	증가율	지출액	증가율	지출액	증가율
2010	341	-	415	-	607	-	822	-	1,444	-
2011	287	-15.91	409	-1.33	598	-1.45	818	-0.45	1,532	6.09
2012	232	-19.02	418	2.18	593	-0.90	886	8.33	1,658	8.23
2013	292	25.86	464	11.00	676	14.00	964	8.80	1,745	5.25
2014	272	-6.85	481	3.66	713	5.47	1,022	6.02	1,708	-2.12

5)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 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이자 비용 등(가계금융복지조사 항목분류 체계 중)

순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2015	281	3.31	496	3.12	711	-0.28	1,026	0.39	1,700	-0.47
2016	275	-2.14	483	-2.62	737	3.66	1,047	2.05	1,761	3.59
2017	283	2.91	533	10.35	773	4.88	1,084	3.53	2,118	20.27
2018	301	6.36	532	-0.19	819	5.95	1,178	8.67	2,339	10.43
2019	326	8.31	565	6.20	873	6.59	1,249	6.03	2,479	5.99
2020	341	4.48	563	-0.37	896	2.62	1,280	2.50	2,448	-1.26
증감액	-		148		289		459		1,004	
증가율	-		35.78		47.54		55.82		69.52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5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또한 5분위 가구가 59.61%(5,097→8,135만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 3분위 59.27%(2,808→4,473만원), 2분위 58.08%(2,150→3,399만원), 4분위 57.28%(3,632→5,713만원) 등으로 나타났고, 1분위 가구는 비소비지출이 늘지 않았음에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53.28%(1,548→2,372만원)로 가장 낮았다.

순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소득도 가장 높은 5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세전과 세후 모두 가장 높았고, 순자산 보유액이 가장 적고 소득도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세전·세후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순자산 5분위별 가구 간 소득 불평등 개선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았다.

[표3] 순자산 5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만원, %)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액	증가율	소득액	증가율	소득액	증가율	소득액	증가율	소득액	증가율
2010	1,548		2,150		2,808		3,632		5,097	
2011	1,554	0.39	2,352	9.38	2,975	5.95	3,814	5.00	5,718	12.19
2012	1,591	2.41	2,388	1.55	3,132	5.27	4,084	7.08	6,185	8.16
2013	1,683	5.78	2,505	4.90	3,295	5.20	4,316	5.68	6,453	4.33
2014	1,758	4.46	2,643	5.51	3,479	5.58	4,568	5.84	6,648	3.02
2015	1,855	5.52	2,778	5.11	3,582	2.96	4,712	3.15	6,705	0.86
2016	1,885	1.62	2,812	1.22	3,679	2.71	4,861	3.16	6,868	2.43
2017	2,129	12.94	3,133	11.42	4,120	11.99	5,340	9.85	7,876	14.68
2018	2,236	5.03	3,242	3.48	4,244	3.01	5,565	4.21	8,070	2.46
2019	2,246	0.45	3,332	2.78	4,383	3.28	5,620	0.99	8,065	-0.06
2020	2,372	5.61	3,399	2.00	4,473	2.04	5,713	1.65	8,135	0.87

증감액	825	1,249	1,664	2,081	3,038
증가율	53.28	58.08	59.27	57.28	59.61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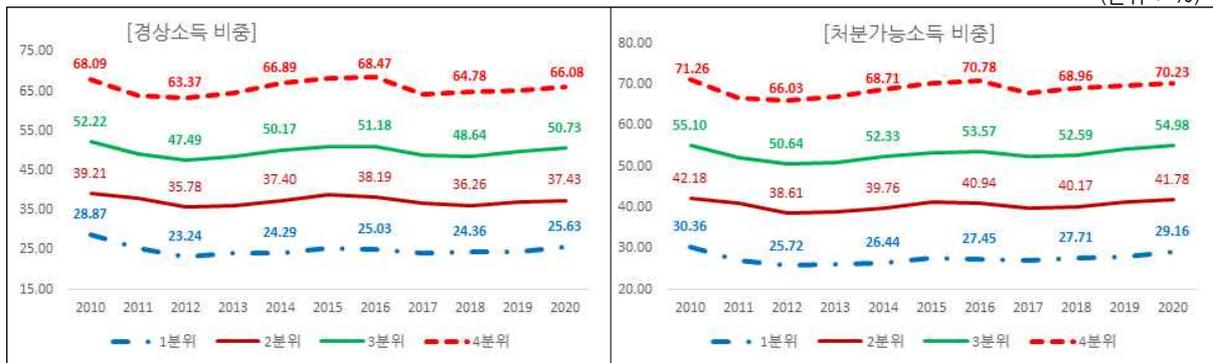
순자산 5분위 가구 간 소득분배 개선이 없었다는 사실은, 순자산 5분위 가구 대비 분위별 소득 비중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2010년과 비교할 때 1~ 4분위 가구 모두 경상소득은 물론 처분가능소득 비중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세전소득인 경상소득 비중의 하락 폭은 더욱 컸다.

5분위 가구 대비 경상소득 비중은, 1분위 가구가 -11.21%(28.87→25.63%) 감소했고, 이어 2분위(-4.53%), 4분위(-2.96%), 3분위(-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 비중 또한 1분위 가구가 -3.96%(30.36→29.16%)로 가장 크게 줄었고, 이어 4분위(-1.46%), 2분위(-0.96%), 3분위(-0.21%) 등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림2] 순자산 5분위 가구 대비 분위별 소득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분위별 소득 비중 = 1~4분위 소득 / 5분위 소득

[표4] 순자산 5분위 가구 대비 분위별 소득 비중 추이

(단위 : %, %p)

구분	경상소득 비중				처분가능소득 비중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2010	28.87	39.21	52.22	68.09	30.36	42.18	55.10	71.26
2011	25.38	38.08	49.29	63.88	27.17	41.12	52.03	66.70
2012	23.24	35.78	47.49	63.37	25.72	38.61	50.64	66.03
2013	24.08	36.20	48.44	64.41	26.08	38.82	51.06	66.88
2014	24.29	37.40	50.17	66.89	26.44	39.76	52.33	68.71
2015	25.41	38.96	51.08	68.27	27.67	41.43	53.42	70.28

순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2016	25.03	38.19	51.18	68.47	27.45	40.94	53.57	70.78
2017	24.13	36.68	48.96	64.29	27.03	39.78	52.31	67.80
2018	24.36	36.26	48.64	64.78	27.71	40.17	52.59	68.96
2019	24.38	36.96	49.85	65.15	27.85	41.31	54.35	69.68
2020	25.63	37.43	50.73	66.08	29.16	41.78	54.98	70.23
증감(%p)	-3.24	-1.77	-1.49	-2.01	-1.20	-0.40	-0.12	-1.04
증감율	-11.21	-4.53	-2.85	-2.96	-3.96	-0.96	-0.21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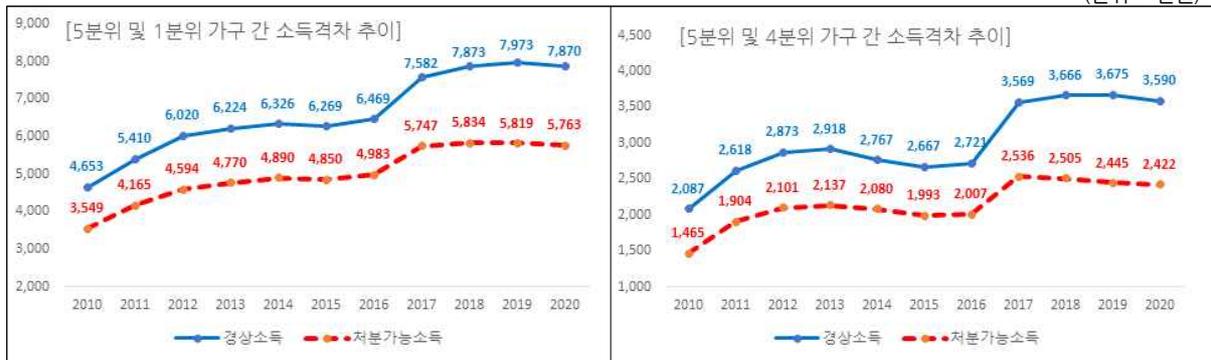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기준연도인 2010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순자산 5분위별 가구 간 소득 불평등 개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5분위 가구와의 소득 격차는 2017년 이후 확대되지 않고 정체되거나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5분위와 1분위 가구 간 경상소득 격차는 '7,582→7,873→7,973→7,870만원',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5,747→5,834→5,819→5,763만원' 등으로 정체되는 양상이었다.

순자산 5분위와 4분위 가구 간 경상소득 격차는 '3,569→3,666→3,675→3,590만원'으로 정체 양상이었고,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2,536→2,505→2,445→2,422만원'으로 소폭이지만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다. 추세 전환을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지속적 관찰이 필요해 보였다.

[그림3] 순자산 5분위 가구와 1, 4분위 가구 간 소득 격차 추이

(단위 : 만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소득 격차 = 순자산 5분위 소득 - 1분위 (or 4분위) 소득

한편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전체 가구 평균 소득 대비 분위별 소득 비중을 산출해보면, 경상소득은 물론 처분가능소득 모두 순자산 5분위 가구를 제외하고는 평균 소득 대비 비중이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양상이라 소득 불평등이 여전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실제로 5분위 가구는 전체 가구 평균 대비 경상소득 비중(173.36→178.64%)은 물론 처분가능소득 비중

(162.27→168.84%) 모두 기준연도 대비 늘어났다. 하지만 순자산 1분위 가구는 경상소득 비중(50.05→45.79%)은 물론 처분가능소득 비중(50.78%→49.23%)도 하락했다. 순자산 3분위 가구는 경상소득과 처분가능소득 비중 모두 소폭 상승했지만, 순자산 4분위와 2분위 가구의 소득 비중은 정체 혹은 소폭 하락한 양상을 보였다.

[그림4] 전체 가구 평균 소득 대비 순자산 5분위별 소득 비중 변화

(단위 :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변화를 보면, 위의 비교 시점(2010~2020년)에서 나타났던 결과와 달리 순자산 1분위의 소득증가율이 48.8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분위(44.12%), 2분위(41.18%), 4분위(40.71%), 5분위(34.93%)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원천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노동소득⁶⁾ 증가율을 보면, 5분위 가구가 49.22%로 가장 높았고, 순자산 1분위 가구는 35.65%로 가장 낮았다. 소득 순증액 또한 순자산 5분위 가구가 2,064만원(4,194→6,25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분위가 1,375만원(3,330→4,705만원), 3분위 1,133만원(2,511→3,644만원), 2분위 714만원(1,954→2,668만원) 등이었고, 1분위 가구는 441만원(1,237→1,678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사업소득의 경우 순자산이 적은 가구일수록 증가율이 높았는데, 1분위 가구가 39.42%(309→431만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 2분위 15.62%(623→720만원), 3분위 13.92%(922→1,050만원), 4분위 9.20%(1,265→1,381만원) 등이었고, 5분위 가구는 -14.97%(2,544→2,172만원)로 역성장세를 보였다.

순자산 5분위별 가구 모두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증가가 매우 두드러졌다. 재산소득 순증액을 보면, 5분위 가구가 713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4분위(228만원), 3분위(116만원), 2분위(62만원), 1분위(20만원) 등이었다. 2분위와 1분위 가구의 경우 재산소득 증

6)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원 명칭은 근로소득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소득으로 표기하였음.

가율은 각 365.62%(17→79만원)와 336.59%(6→26만원)로 매우 높았지만, 기준연도의 재산소득이 매우 적기 때문에 나타난 기저효과에 불과했다.

공적이전소득 순증액을 보면, 5분위 324만원(284→608만원), 1분위 284만원(164→448만원), 4분위 273만원(180→453만원), 2분위 261만원(126→387만원), 3분위 243만원(148→391만원) 등이었다.

[표5] 순자산 5분위별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추이

(단위 : 만원, %)

구 분	전 체	노동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중양값
1분위	2012	1,823	1,237	309	6	164	1,452
	2020	2,713	1,678	431	26	448	2,033
	증감	890	441	122	20	284	581
	증가율	48.80	35.65	39.42	336.59	173.00	22.61
2분위	2012	2,806	1,954	623	17	126	2,509
	2020	3,961	2,668	720	79	387	3,480
	증감	1,155	714	97	62	261	971
	증가율	41.18	36.56	15.62	365.62	207.05	24.14
3분위	2012	3,725	2,511	922	56	148	3,500
	2020	5,368	3,644	1,050	172	391	4,874
	증감	1,643	1,133	128	116	243	1,374
	증가율	44.12	45.10	13.92	207.26	164.31	26.39
4분위	2012	4,970	3,330	1,265	123	180	4,730
	2020	6,993	4,705	1,381	351	453	6,323
	증감	2,023	1,375	116	228	273	1,593
	증가율	40.71	41.30	9.20	185.74	151.83	41.04
5분위	2012	7,843	4,194	2,554	744	284	6,500
	2020	10,583	6,258	2,172	1,457	608	8,927
	증감	2,740	2,064	-382	713	324	2,427
	증가율	34.93	49.22	-14.97	95.87	113.95	28.85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순자산 5분위와 1분위 가구 간의 소득원천별 소득 격차 추이를 살펴보면, 노동소득의 경우 그 격차가 2019년 4,675만원에서 2020년 4,580만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2012년 2,957만원에서 2020년 4,580만원까지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소득원천 중 재산소득 격차는 2012년 738만원에서 2016년 892만원까지 등락을 보이다가, 2017년 1,243만원으로 단기 급등하였고, 이후 2020년 1,431만원까지 꾸준하게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

[그림5] 순자산 5분위와 1분위 가구 노동소득·재산소득 및 소득 차 추이

(단위 : 만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주) 소득 차 = 5분위 소득 - 1분위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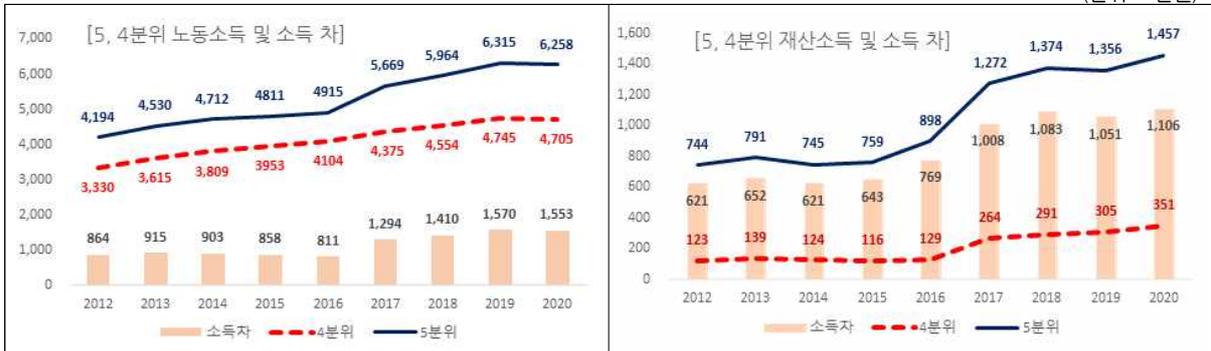
순자산 5분위와 1분위 가구 간의 노동소득 및 재산소득 격차 추이는, 5분위와 4분위 가구 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노동소득 격차는 2012년 864만원에서 2020년 1,553만원으로 확대되는 양상이었는데, 2020년 소득 격차는 2019년보다는 다소 줄었다.

재산소득 격차는 2012년 621만원에서 2020년 1,106만원까지 꾸준히 확대되는 양상이었는데, 특히 2016년 769만원에서 2017년 1,008만원으로 단기 급등하였다.

5분위와 1분위는 물론 5분위와 4분위 가구 간에도 2016년 이후 1년 사이에 재산소득 격차가 급등했음을 알 수 있는데, 서울의 주택가격 급등세가 2016년에 시작되었음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순자산이 가장 많았던 5분위 가구 재산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6] 순자산 5분위와 4분위 가구 노동소득·재산소득 및 소득 차 추이

(단위 : 만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주) 소득 차 = 5분위 소득 - 4분위 소득

순자산 5분위 가구들의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변화 양상은, 소득원천별 소득 비중 변화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순자산 상위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이 더 많이 늘었다. 반면 사업소득은 순자산 5분위 모두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순자산 상위 가구일수록 더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순자산 5분위 가구 노동소득 비중은 2012년 53.47%에서 2020년 59.14%로 5.66%p 상승하여 가장 상승 폭이 컸으며, 재산소득 또한 9.49%에서 13.77%로 4.28%p 늘어났다. 반면 사업소득은 32.56%에서 20.52%로 -12.04%p나 줄어,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순자산 1분위 가구의 노동소득 비중은 2012년 67.86%에서 2020년 61.86%로 -6.00%p 하락했고, 재산소득 비중은 0.33%에서 0.97%로 0.64%p 증가했다. 반면 사업소득은 16.95%에서 15.88%로 -1.07%p 하락했지만, 감소 폭은 5분위 가구 중 가장 적었다.

[표6] 순자산 5분위별 소득원천별 소득 비중 변화

(단위 : %, %p)

구 분		전 체	노동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1분위	2012	100.00	67.86	16.95	0.33	9.00	5.81
	2020	100.00	61.86	15.88	0.97	16.50	4.79
	증감	-	-6.00	-1.07	0.64	7.51	-1.02
2분위	2012	100.00	69.64	22.20	0.61	4.49	3.06
	2020	100.00	67.36	18.18	2.00	9.77	2.69
	증감	-	-2.28	-4.02	1.39	5.28	-0.37
3분위	2012	100.00	67.41	24.75	1.50	3.97	2.36
	2020	100.00	67.87	19.57	3.21	7.29	2.07
	증감	-	0.46	-5.19	1.70	3.31	-0.29
4분위	2012	100.00	67.00	25.45	2.47	3.62	1.45
	2020	100.00	67.29	19.75	5.03	6.48	1.45
	증감	-	0.28	-5.70	2.55	2.86	0.00
5분위	2012	100.00	53.47	32.56	9.49	3.62	0.87
	2020	100.00	59.14	20.52	13.77	5.74	0.83
	증감	-	5.66	-12.04	4.28	2.12	-0.04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소득원천별 소득 비중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5분위 가구의 재산소득이 크게 늘었는데, 2012년 744만원에서 2020년 1,457만원으로 713만원이나 늘어났다. 소득 비중 또한 9.49%에서 13.77%로 대폭 상승했다.

[그림] 순자산 5분위 가구 재산소득 및 재산소득 비중 추이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비목별 소비지출 추이를 보면, 소비지출증가율은 1분위(25.10%), 2분위(23.87%), 3분위(23.55%), 4분위(17.32%), 5분위(12.05%) 등으로, 순자산이 적을수록 소비지출증가율은 더 높았다. 소비지출 순증액은 3분위 가구가 50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4분위(470만원), 5분위(440만원), 2분위(407만원), 1분위(326만원) 등의 순이었다.

순자산 5분위 가구 집단 모두 식료품, 주거비, 의료비 지출은 증가했고, 교육비 지출은 줄었다. 교통비나 통신비의 경우 1분위 가구는 늘었지만, 5분위 가구는 줄었다.

5분위 가구는 식료품비 순증액이 2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58만원)와 주거비(15만원)도 늘었지만, 교육비(-83만원)와 교통비(-50만원), 통신비(-5만원) 등은 줄었다.

1분위 가구는 교육비(-21만원)만 줄고, 식료품(123만원), 의료비(45만원), 주거비(41만원), 교통비(14만원), 통신비(10만원) 등 모두 늘었다. 특히 의료비 증가율은 63.38%로 높았다.

[표7] 순자산 5분위별 비목별 소비지출 추이

(단위 : 만원, %)

구분	연도	소비계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지출
1분위	2012	1,299	385	287	117	71	130	106	203
	2020	1,625	508	328	96	116	144	116	318
	증감	326	123	41	-21	45	14	10	115
	증가율	25.10	31.95	14.29	-17.95	63.38	10.77	9.43	56.65

순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2분위	2012	1,705	498	243	191	101	213	141	318
	2020	2,112	661	278	173	147	212	148	493
	증감	407	163	35	-18	46	-1	7	175
	증가율	23.87	32.73	14.40	-9.42	45.54	-0.47	4.96	55.03
3분위	2012	2,144	616	256	298	124	268	167	415
	2020	2,649	808	286	289	187	267	172	641
	증감	505	192	30	-9	63	-1	5	226
	증가율	23.55	31.17	11.72	-3.02	50.81	-0.37	2.99	54.46
4분위	2012	2,713	739	293	468	155	320	184	554
	2020	3,183	937	321	423	203	307	188	804
	증감	470	198	28	-45	48	-13	4	250
	증가율	17.32	26.79	9.56	-9.62	30.97	-4.06	2.17	45.13
5분위	2012	3,651	951	381	670	209	405	209	824
	2020	4,091	1,186	396	587	267	355	204	1,096
	증감	440	235	15	-83	58	-50	-5	272
	증가율	12.05	24.71	3.94	-12.39	27.75	-12.35	-2.39	33.01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그림8] 순자산 5분위별 1인당 소비지출액 및 5분위 가구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1인당 소비지출액 = 각년도 순자산 5분위별 소비지출액 / 각년도 순자산 5분위별 가구원 수

순자산 5분위별 소비지출액을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 1인당 소비지출 및 비목별 소비지출액을 산출하여 가구당 소비지출 추이와 비교하여 보았다.

가구당 소비지출 순증액의 경우 3분위가 가장 많았고, 하위 분위보다는 상위 분위 순증액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반면 1인당 소비지출 순증액은 4분위 가구가 23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분위(231만원), 2분위(224만원), 1분위(222만원) 등이었고, 5분위가 213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가구 간 편차도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1인당 소비지출증가율은 가구당 증가율과 마찬가지로 순자산이 적은 분위일수록 높았다.

5분위 가구의 1인당 소비지출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결과 5분위 가구 대비 분위별 1인당 소비지출액 비중은 기준연도인 2010년보다 모두 상승했다. 1분위 가구 1인당 소비지출액 비중은 2012년 53.37%에서 2020년 61.57%로 15.36%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림9] 순자산 5분위별 1인당 식료품비, 5분위 가구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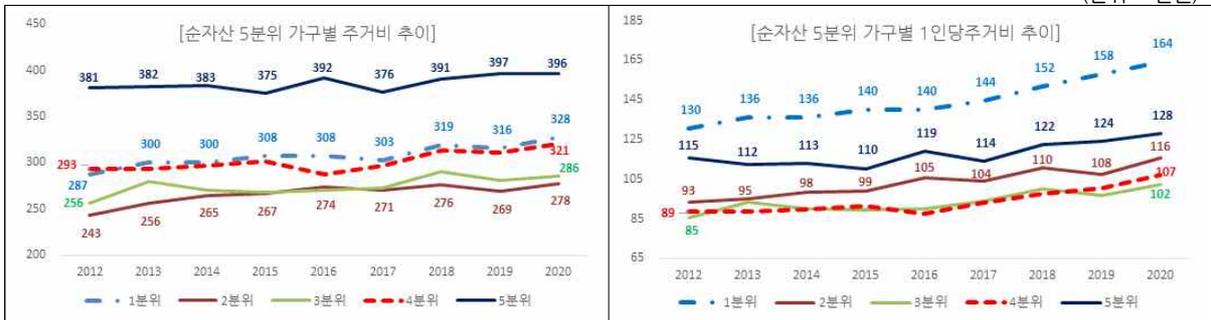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1인당 식료품비 = 각년도 순자산 5분위별 식료품비 / 각년도 순자산 5분위별 가구원 수

가구당 식료품비 증가율은 1분위(31.95%), 2분위(32.73%), 3분위(31.17%), 4분위(26.79%), 5분위(24.71%) 등으로, 1~3분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인당 식료품비 증가율은 1분위(45.14%), 2분위(43.79%), 3분위(40.54%) 4분위(39.47%), 5분위(32.76%) 등으로 순자산이 적은 분위일수록 증가율이 높았다. 그 결과 5분위 가구 대비 분위별 1인당 식료품비 비중 또한 모두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1분위 가구의 비중 증가율은 9.33%(60.73 → 66.39%)로 가장 높았다.

[그림10] 순자산 5분위별 주거비 및 1인당 주거비 추이

(단위 : 만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1인당 주거비 = 각년도 순자산 5분위별 주거비 / 각년도 순자산 5분위별 가구원 수

2020년 기준 가구당 주거비를 보면, 5분위 가구가 39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분위(328만원), 4분위(321만원), 3분위(286만원), 2분위(278만원)의 순이었다. 하지만 1인당 주거비를 산출하면, 1분위가 16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분위(128만원), 2분위(116만원), 4분위(107만원), 3분위(102만원)의 순으로, 순자산이 적은 가구가 주거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1분위의 1인당 주거비 증가율은 25.71%(130→164만원)로 5분위 가구 증가율 10.64%(115→128만원)보다 2.4배나 높았다. 2020년 기준 순자산 5분위 가구 대비 각 분위별 1인당 주거비 비중은 기준연도인 2012년보다 모두 높아졌지만, 5분위 가구보다 더 많은 주거비를 지출하는 유일한 가구 집단은 1분위 가구로, 5분위 대비 1분위 1인당 주거비 비중은 2012년 112.99%에서 2020년 128.38%로 15.39%p 상승했다.

[그림11] 순자산 5분위별 1인당 주거비 및 5분위 가구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1인당 주거비 = 각년도 순자산 5분위별 주거비 / 각년도 순자산 5분위별 가구원 수

2020년 기준 순자산 5분위별 가구당 교육비는, 5분위가 5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분위(423만원), 3분위(289만원), 2분위(173만원), 1분위(96만원)의 순으로 순자산이 많을수록 교육비 지출도 많았다. 1인당 교육비 또한 5분위(189만원), 4분위(141만원), 3분위(103만원), 2분위(72만원), 1분위(48만원) 가구 등으로 위계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순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교육비 투입량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순자산 5분위 가구 대비 분위별 1인당 교육비 비중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2020년 기준 5분위 가구 대비 분위별 1인당 교육비 비중은 4분위(74.46%), 3분위(54.51%), 2분위(38.07%), 1분위

(25.35%) 가구 등이었다. 그나마 2~3분위 가구는 2012년보다 비중이 소폭이나마 늘어났지만, 1분위 가구는 2012년 26.19%에서 2020년 25.35%로 -0.84%p 하락했다.

[그림12] 순자산 5분위별 1인당 교육비 및 5분위 가구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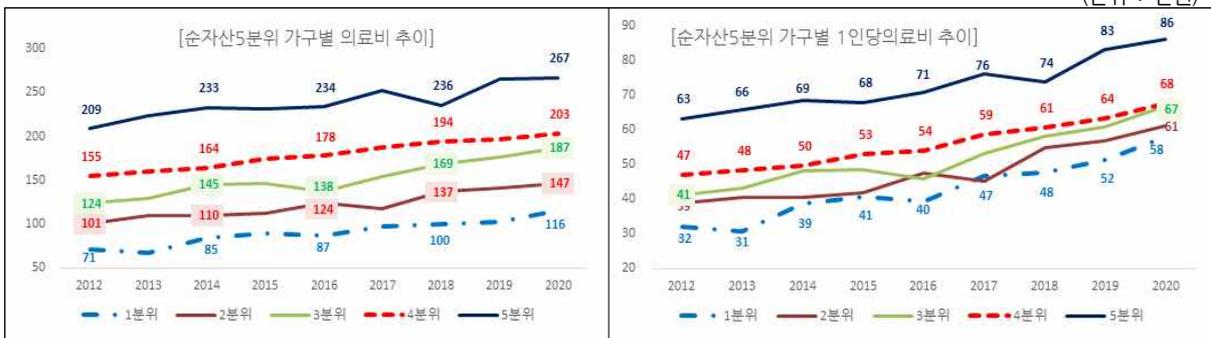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1인당 교육비 = 각년도 순자산 5분위별 교육비 / 각년도 순자산 5분위별 가구원 수

2020년 기준 순자산 분위별 가구주 평균연령이 1분위(57.9세), 2분위(55.6세), 3분위(54.9세), 4분위(55.3세), 5분위(56.7세) 등으로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비슷한 연령대의 학령기 자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국 학력별 소득 및 자산 격차가 매우 큰 우리 사회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의 자산 불평등이 미래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림13] 순자산 5분위별 의료비 및 1인당 의료비 추이

(단위 : 만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1인당 의료비 = 각년도 순자산 5분위별 의료비 / 각년도 순자산 5분위별 가구원 수

2020년 가구당 의료비는, 5분위(267만원), 4분위(203만원), 3분위(187만원), 2분위(147만원), 1분위(116만원) 등으로, 순자산이 많은 상위 분위일수록 의료비 지출도 많았다. 분위별

가구원 수를 반영한 1인당 의료비 또한 5분위(86만원), 4분위(68만원), 3분위(67만원), 2분위(61만원), 1분위(58만원) 등으로 위계가 분명했다.

소득 5분위별 1인당 의료비의 경우 저소득 가구 집단인 1분위와 2분위의 의료비 지출이 상위 분위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위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었는데, 그 주요 원인은 가구주 평균연령의 편차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득 5분위별 2020년 가구주 평균연령은 1분위(67.7세), 2분위(57.6세), 3분위(52.7세), 4분위(51.0세), 5분위(51.4세) 등이었다.

소득에서 총지출(소비지출+비소비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 순자산 5분위별 저축가능액 추이를 보면,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저축가능액 순증액은 5분위 1,510만원(2,534→4,044만원), 4분위 1,159만원(1,371→2,530만원), 3분위 835만원(988→1,823만원), 2분위 603만원(683→1,286만원), 1분위 455만원(292→747만원) 등이었다. 증가율로 보면 1분위가 155.70%로 가장 높았는데, 기준액이 작아 발생하는 기저효과 이외의 의미는 없어 보인다.

[표8] 순자산 5분위별 소득 및 지출액, 저축가능액 추이 (단위 : 만원, %, %p)

구 분		소득액(a)	소비지출(b)	비소비지출 [◎]	저축가능액 (a-b-c)	지출액 /소득액	저축가능액 /소득액
1분위	2012	1,823	1,299	232	292	83.98	16.02
	2020	2,713	1,625	341	747	72.48	27.52
	증감	890	326	109	455	(11.51)	11.51
	증가율	48.80	25.10	46.98	155.70	-13.70	71.84
2분위	2012	2,806	1,705	418	683	75.66	24.34
	2020	3,961	2,112	563	1,286	67.53	32.47
	증감	1,155	407	145	603	(8.13)	8.13
	증가율	41.18	23.87	34.69	88.36	-10.75	33.42
3분위	2012	3,725	2,144	593	988	73.48	26.52
	2020	5,368	2,649	896	1,823	66.03	33.97
	증감	1,643	505	303	835	(7.44)	7.44
	증가율	44.12	23.55	51.10	84.55	-10.13	28.06
4분위	2012	4,970	2,713	886	1,371	72.41	27.59
	2020	6,993	3,183	1,280	2,530	63.82	36.18
	증감	2,023	470	394	1,159	(8.59)	8.59
	증가율	40.71	17.32	44.47	84.55	-11.87	31.16
5분위	2012	7,843	3,651	1,658	2,534	67.69	32.31

	2020	10,583	4,091	2,448	4,044	61.79	38.21
	증감	2,740	440	790	1,510	(5.90)	5.90
	증가율	34.93	12.05	47.65	59.58	-8.72	1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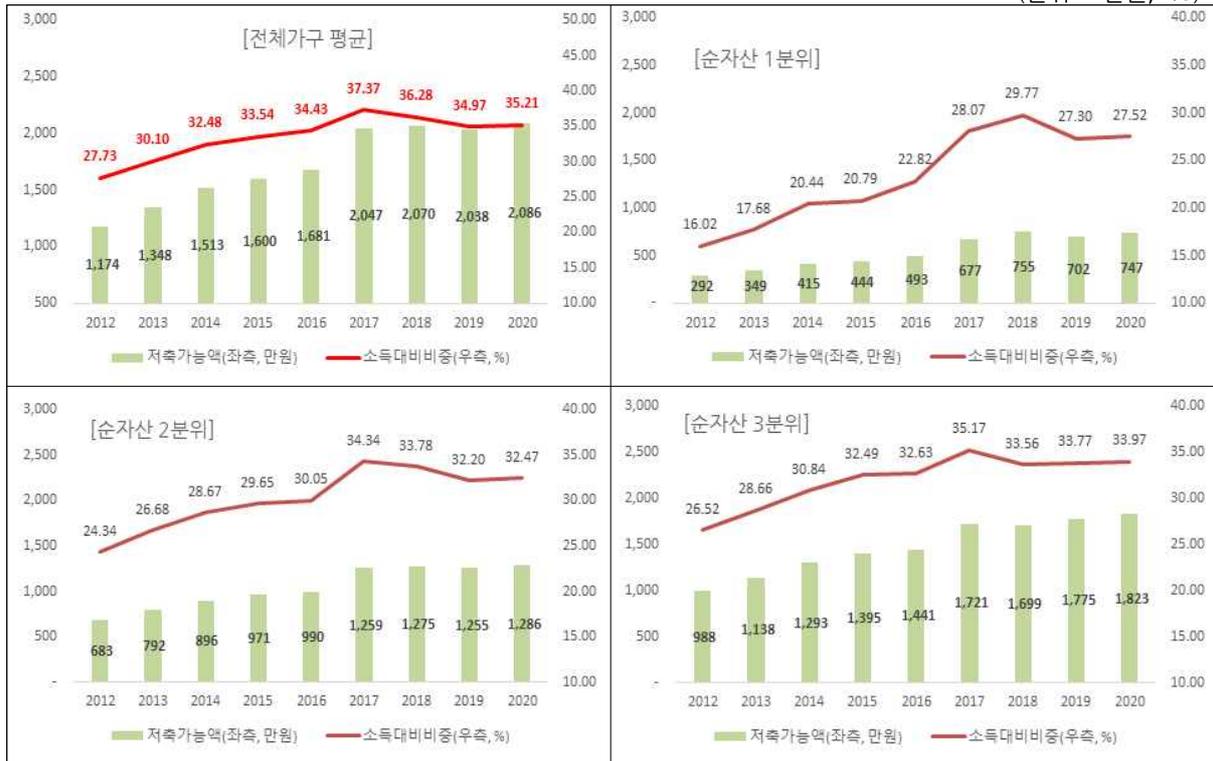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순자산 5분위별 경상소득 대비 저축가능액 비중 추이를 보면, 순자산 5분위 가구 집단 모두 2012년보다 비중이 증가했다. 1분위 가구가 11.51%p(16.02→27.52%)로 가장 많이 늘었고, 5분위 가구는 5.90%p(32.31→38.21%)로 가장 적게 늘었다. 2020년 기준 소득 대비 저축가능액 비중은 5분위(38.21%), 4분위(36.18%), 3분위(33.97%), 2분위(32.47%), 1분위(27.52%) 등이었다. 순자산 5분위 가구 모두 저축가능액 비중이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기간 소득증가율이 소비지출증가율보다 높았기 때문이었다.

2020년 기준 전체 가구 평균 저축가능액은 2,086만원, 소득대비 비중은 35.21%였는데, 이 기준을 넘어서는 순자산 5분위별 가구 집단은 4분위(2,530만원, 36.18%)와 5분위(4,044만원, 38.21%) 가구였고, 1~3분위 가구는 전체 가구 평균보다 낮았다.

[그림14] 순자산 5분위별 저축가능액 및 소득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만원, %)



순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순자산 5분위 가구 대비 분위별 저축가능액 비중 추이를 보면, 기준연도인 2012년과 비교할 때 1~4분위 가구 모두 상승했다. 5분위 대비 저축가능액 비중 증가율은 1분위 가구가 60.23%(11.52→18.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2분위 18.03%(26.95→31.81%), 3분위 15.65%(38.99→45.09%), 4분위 15.65%(54.10→62.57%) 등이었다. 1분위 가구의 저축가능액 비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이유는 해당 기간 소득증가율이 가장 높았기에 가능했다.

[그림15] 순자산 5분위 대비 분위별 저축가능액 비중 / 서울아파트 평균매매가 저축 소요기간

(단위 : %, 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KB주택가격동향에 의거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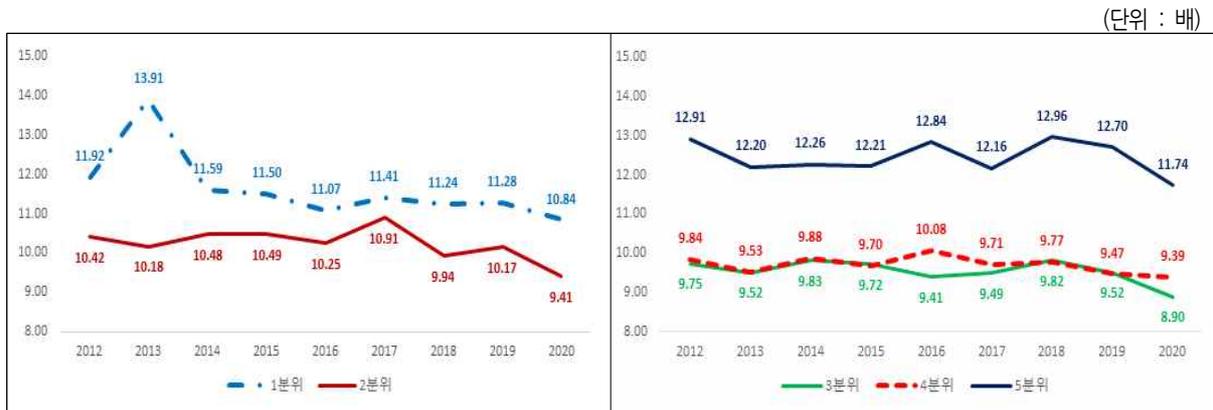
주) 서울아파트 평균매매가 저축 소요기간 = 각년도 12월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 각년도 소득 분위별 저축가능액

순자산 5분위별 저축가능액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아파트 가격은 KB주택가격동향에 의거 각 년도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활용하였는데, 평균 매매가는 2012년 12월 50,780만원에서 2016년 59,670만원으로, 2020년 12월에는 104,299만원까지 급상승하였다.

저축가능액이 가장 많은 순자산 5분위 가구의 경우, 저축가능액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

매하려면 2012년에는 20년이 걸렸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2020년에는 25.8년이 필요했다. 그 밖에 2020년 기준 서울아파트 평균매매가를 저축하기 위한 소요 기간은 4분위(41.2년), 3분위(57.2년), 2분위(81.1년), 5분위(139.7년) 등으로, 순자산 1~4분위 가구 모두 무주택이면 서 기존에 저축한 자금이 없다면 사실상 서울에서 주택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림16] 순자산 5분위별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순자산 5분위별 가구 집단 내에서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변화를 보면, 순자산 5분위 가구 집단 모두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소득 5분위 소득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순자산 1분위의 경우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소득증가율은 소득 1분위가 52.70%로 소득 5분위 38.85%보다 높았고, 순자산 2분위(48.51% : 34.21%), 3분위(56.50% : 42.96%), 4분위(52.87% : 45.94%), 5분위(50.73% : 37.07%) 등 모두 소득 1분위 증가율이 소득 5분위 증가율보다 높았다. 그 결과 순자산 5분위별 소득 5분위 배율은 [그림15]에서와 같이 순자산 5분위 가구 모두 2012년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순자산 동일 분위 내 평균 증가율과 중앙값 증가율을 비교하면, 1분위(48.82% : 40.01%), 2분위(41.16% : 38.70%), 3분위(44.11% : 39.26%), 4분위(40.70% : 33.68%) 등으로, 중위소득 증가율보다는 평균소득 증가율이 더 높았다. 이는 순자산 동일 분위 내에서 상위 50% 가구 집단과 하위 50% 가구 집단만을 놓고 보면 상위 50% 가구 집단의 소득증가율이 하위 50% 가구 집단보다 높았음을 의미한다. 즉, 해당 분위 내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은 하락했지만, 소득 상·하위 50% 가구 집단 간 소득 격차는 해소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순자산 5분위 가구만 유일하게 평균 소득 증가율(34.94%)보다 중위소득 증가율(37.34%)이 소폭이지만 높게 나타났다.

[표9] 순자산 5분위 소득5분위별 가구소득 변화

(단위 : 만원, %)

구 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중앙값
순자산 1분위	2012	1,823	704	1,951	3,232	4,825	8,393	1,452
	2020	2,713	1,075	2,684	4,584	6,982	11,654	2,033
	증감	890	371	733	1,352	2,157	3,261	581
	증가율	48.82	52.70	37.57	41.83	44.70	38.85	40.01
순자산 2분위	2012	2,806	771	2,010	3,313	4,863	8,030	2,509
	2020	3,961	1,145	2,762	4,619	6,924	10,777	3,480
	증감	1,155	374	752	1,306	2,061	2,747	971
	증가율	41.16	48.51	37.41	39.42	42.38	34.21	38.70
순자산 3분위	2012	3,725	823	2,013	3,357	5,014	8,021	3,500
	2020	5,368	1,288	2,795	4,686	7,094	11,467	4,874
	증감	1,643	465	782	1,329	2,080	3,446	1,374
	증가율	44.11	56.50	38.85	39.59	41.48	42.96	39.26
순자산 4분위	2012	4,970	872	1,998	3,426	5,125	8,578	4,730
	2020	6,993	1,333	2,806	4,728	7,172	12,519	6,323
	증감	2,023	461	808	1,302	2,047	3,941	1,593
	증가율	40.70	52.87	40.44	38.00	39.94	45.94	33.68
순자산 5분위	2012	7,843	891	2,015	3,398	5,145	11,503	6,500
	2020	10,583	1,343	2,859	4,747	7,303	15,767	8,927
	증감	2,740	452	844	1,349	2,158	4,264	2,427
	증가율	34.94	50.73	41.89	39.70	41.94	37.07	37.34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 가구 재무(자산 & 부채) 상태 변화

2020년 기준 순자산 5분위별 자산총액은 5분위(131,482만원), 4분위(47,683만원), 3분위(26,881만원), 2분위(13,068만원), 1분위(3,579만원) 등으로, 5분위 자산은 1분위 자산의 36.7배에 달하는 등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였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총자산 순증액 또한 5분위 가구가 44,59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분위(19,836만원), 3분위(12,222만원), 2분위(6,355만원), 1분위(1,297만원) 등이었다. 5분위 가구 순증액은 1분위 가구 순증액의 34.4배에 달했으며, 순자산 차상위 가구인 4분위보다도 2.25배가 더 많았다.

[표10] 순자산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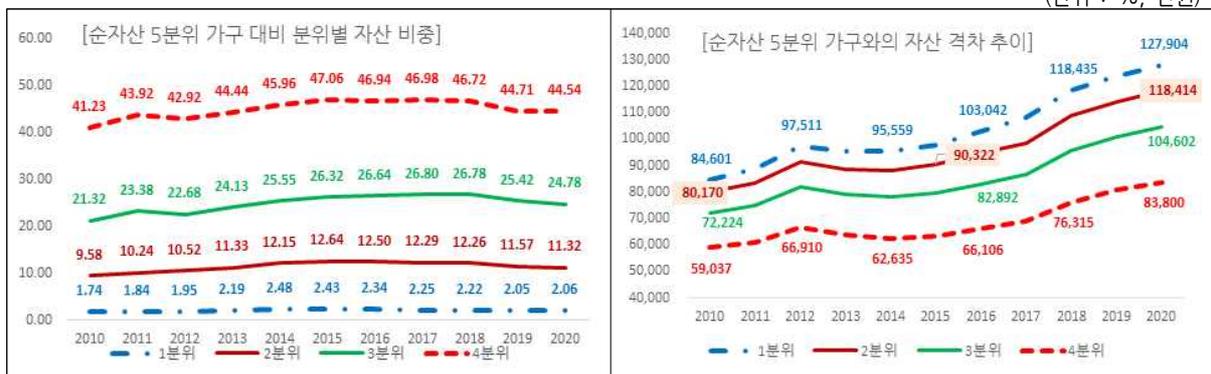
(단위 : 만원, %)

구 분		순자산	자산		부채			
			금융자산	실물자산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1분위	2010	-213	2,282	1,144	1,139	2,496	2,392	104
	2020	675	3,579	2,125	1,453	2,903	2,800	103
	증감액	888	1,297	981	314	407	408	-1
	증가율	N/A	56.84	85.75	27.57	16.31	17.06	-0.96
2분위	2010	5,145	6,713	3,189	3,525	1,568	1,352	216
	2020	8,992	13,068	5,527	7,541	4,076	3,742	335
	증감액	3,847	6,355	2,338	4,016	2,508	2,390	119
	증가율	74.77	94.67	73.31	113.93	159.95	176.78	55.09
3분위	2010	11,867	14,659	4,661	9,999	2,793	2,212	580
	2020	20,493	26,881	8,183	18,698	6,388	5,550	839
	증감액	8,626	12,222	3,522	8,699	3,595	3,338	259
	증가율	72.69	83.38	75.56	87.00	128.71	150.90	44.66
4분위	2010	23,212	27,847	6,780	21,067	4,635	3,175	1,461
	2020	38,773	47,683	11,140	36,543	8,910	6,784	2,126
	증감액	15,561	19,836	4,360	15,476	4,275	3,609	665
	증가율	67.04	71.23	64.31	73.46	92.23	113.67	45.52
5분위	2010	75,286	86,883	13,652	73,232	11,597	6,621	4,976
	2020	112,481	131,482	25,542	105,940	19,001	11,371	7,630
	증감액	37,195	44,599	11,890	32,708	7,404	4,750	2,654
	증가율	49.40	51.33	87.09	44.66	63.84	71.74	53.34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그림17] 순자산 5분위 가구 대비 분위별 자산 비중 및 자산 격차 추이

(단위 : %, 만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자산증가율은 2분위(94.67%), 3분위(83.38%), 4분위(71.23%), 1분위(56.84%), 5분위(51.33%) 가구의 순으로, 1분위와 5분위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5분위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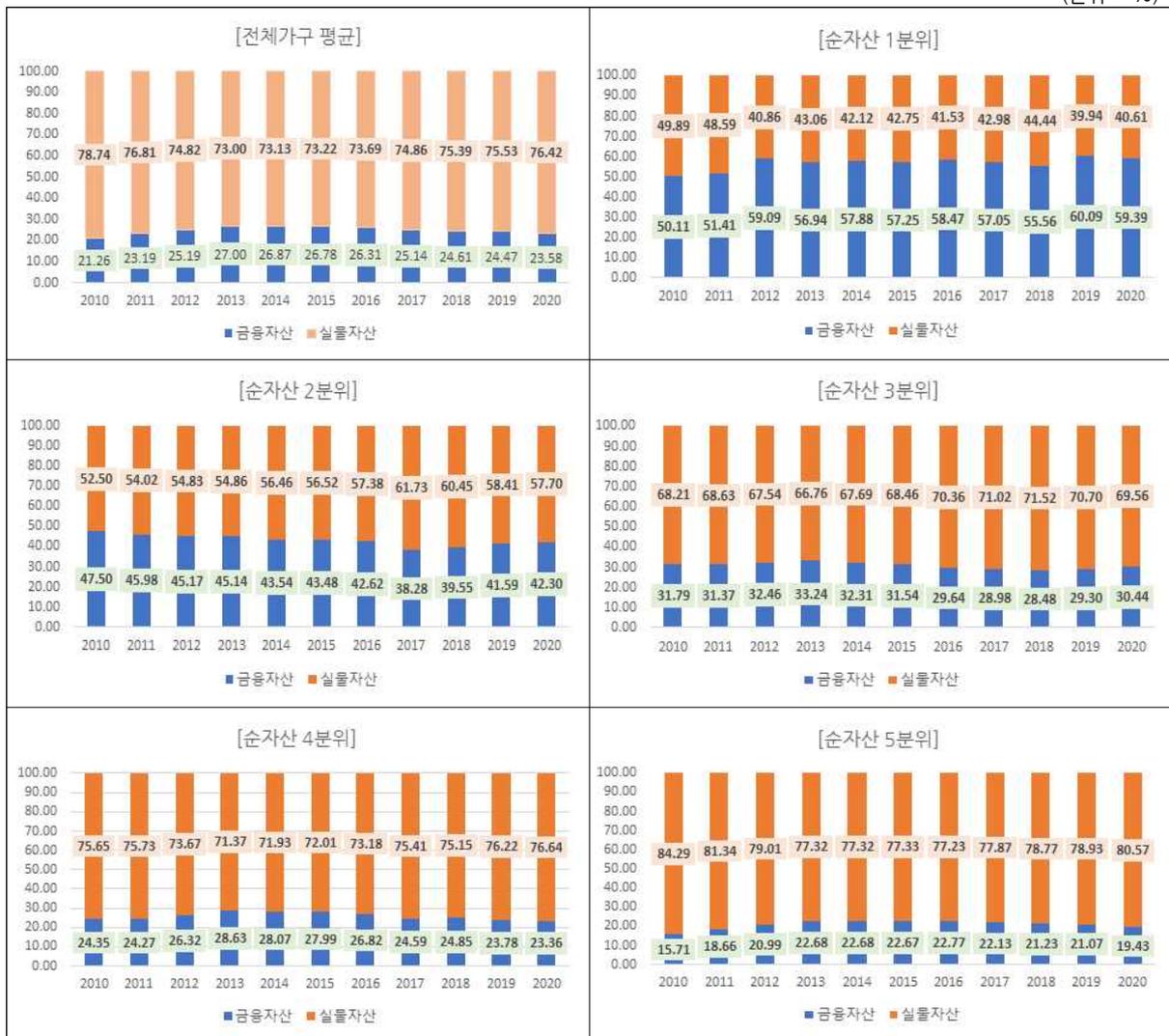
순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결과,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5분위 대비 분위별 자산 비중은 4분위(3.32%p), 3분위(3.46%p), 2분위(1.74%p), 1분위(0.32%p) 등으로 소폭이나마 모두 상승했다.

5분위 자산 대비 1~4분위 가구의 자산 비중이 늘었음에도, 5분위 가구와의 자산 격차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확대되는 등 순자산 5분위별 자산 불평등은 더 악화하였다. 5분위와 1분위 가구와의 자산 격차는 2010년 84,601만원에서 2020년 127,904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이어 2분위(80,170→118,414), 3분위(72,224→104,602만원), 4분위(59,037→83,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18] 순자산 5분위별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 비중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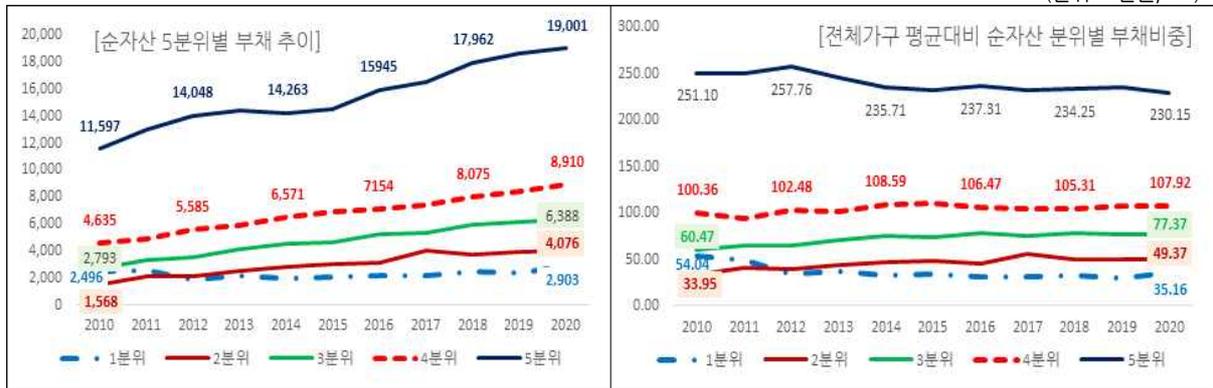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20년 기준 실물자산 비중은 5분위(80.57%), 4분위(76.64%), 3분위(69.56%), 2분위(57.70%), 1분위(40.61%) 등의 순으로, 순자산이 많은 분위일수록 실물자산 또한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자산 순증액 또한 많았다. 1분위 가구의 실물자산 비중은 불과 40.61%로 금융자산 비중 59.39%보다 더 낮았다. 2010년 기준으로도 1분위 가구의 실물자산 비중은 49.89%로 순자산 5분위 중 가장 낮았는데, 그 결과 자산 및 순자산 순증액은 1,297만원과 888만원으로 5분위 가구 순증액의 2.4%와 2.9% 수준에 머물렀다.

[그림19] 순자산 5분위별 부채 / 전체 가구 평균 부채 대비 분위별 부채 비중 추이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저자계산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부채 순증액 또한 실물자산 비중이 높을수록 많았다. 5분위 가구 부채 순증액은 7,404만원(11,597→19,0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분위 4,275만원(4,635→8,910만원), 3분위 3,595만원(2,793→6,388만원), 2분위 2,508만원(1,568→4,076만원), 1분위 407만원(2,496→2,903만원)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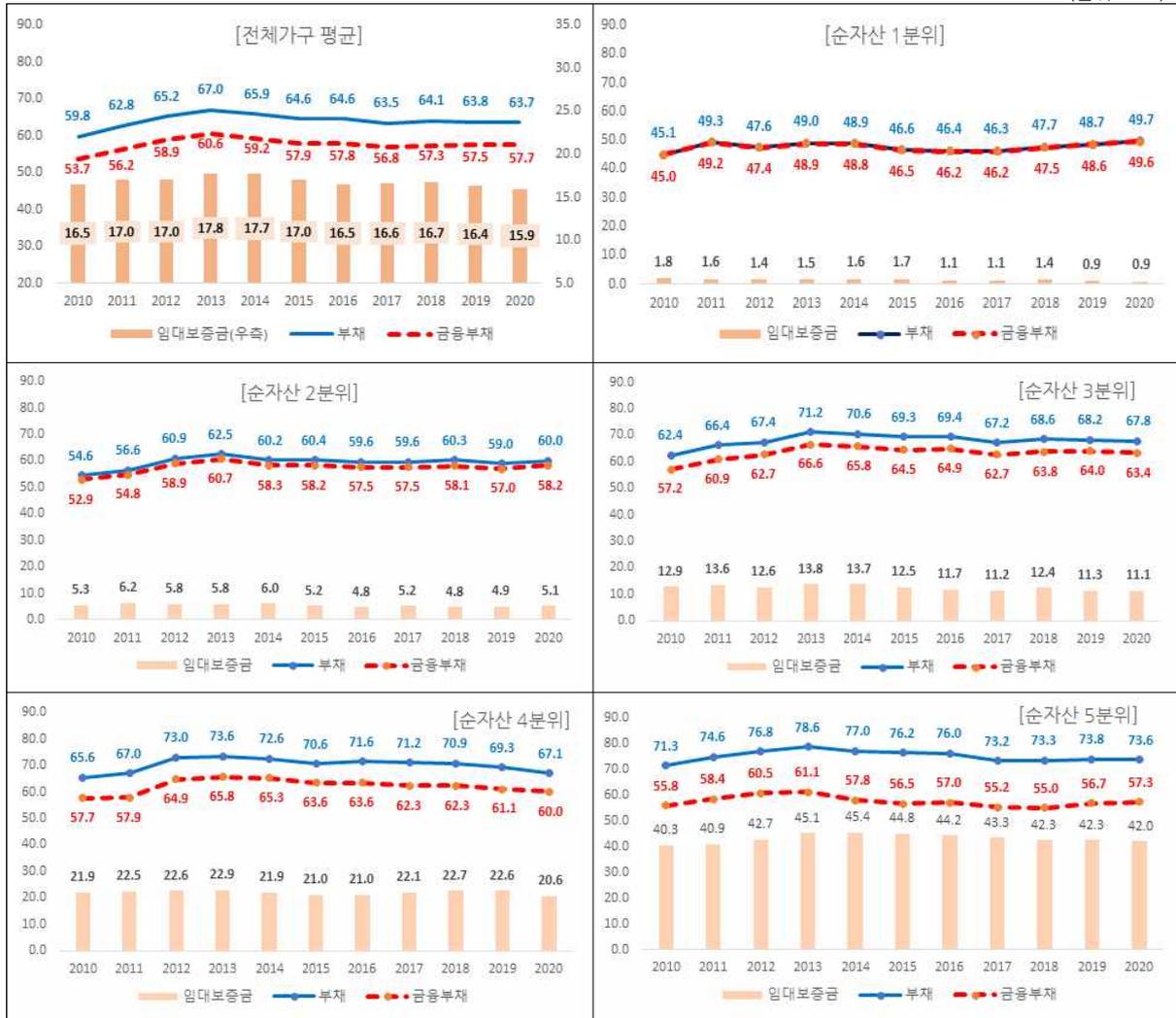
부채 순증액은 5분위 가구가 가장 많았지만, 5분위 가구 부채증가율은 63.84%로 2분위(159.95%), 3분위(128.71%), 4분위(92.23%)보다는 낮았고, 1분위 가구의 부채증가율은 불과 16.31%로 가장 낮았다.

부채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결과, 전체 가구 평균 부채 대비 5분위 가구 부채 비중은 2010년 251.10%에서 2020년 230.15%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전체 가구 평균 부채 대비 분위별 비중은 4분위(107.92%), 3분위(77.37%), 2분위(49.37%), 1분위(35.16%) 등으로, 5분위 가구의 부채가 다른 분위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그림20] 순자산 5분위별 부채·금융부채 및 임대보증금 보유 가구 분포 추이

(단위 : %)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순자산 5분위별로 부채 및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 보유 가구 분포 추이를 보면, 5분위 가구가 부채 관련 항목 모두 가구 분포가 가장 높았다. 2020년 기준 순자산 5분위 가구는 부채(73.6%), 금융부채(57.3%), 임대보증금 부채(42.0%)의 가구 분포를 보였다. 그런데 5분위 임대보증금 보유 가구 분포 42.0%는 4분위(20.6%), 3분위(11.1%), 2분위(5.1%), 1분위(0.9%) 가구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5분위 가구의 상당수가 본인 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순자산 1분위 가구의 경우 2020년 부채 보유 가구 분포는 49.7%로 금융부채 보유 가구 분포 49.6%와 별 차이가 없었는데, 부채증가율이 순자산 5분위 가구 중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보유 가구 분포는 2010년 45.1%에서 2020년 49.7%로 10.18% 증가해, 가구 분포는 순자산 5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임대보증금 부채 보유 가구 분포는 1.8%에서 0.9%로 -0.9%p나 감소했다. 이를 통해 1분위 가구 부채 대개가 재테크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한 대출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21] 순자산 5분위별 원리금상환액 추이 / 전체 가구 평균 원리금상환액 대비 분위별 비중 추이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순자산 5분위별 부채증가율도 1분위(16.31%) 2분위(159.95%), 3분위(128.71%), 4분위(92.23%), 5분위(63.84%) 등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지만,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은 1분위(58.07%), 2분위(135.62%), 3분위(170.89%), 4분위(147.91%), 5분위(155.43%) 등으로, 2분위 가구를 제외하고는 부채증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원리금상환액은 5분위(2,121만원), 4분위(1,308만원), 3분위(1,191만원), 2분위(759만원), 1분위(556만원) 등으로 가계의 유동성을 악화하고, 소비지출을 자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전체 가구 평균 원리금상환액 대비 분위별 원리금상환액 비중을 보면, 5분위 10.70%p(168.00→178.69%), 4분위 3.45%p(106.74→110.19%), 3분위 11.39%p(88.93→100.32%) 등은 비중이 늘어났고, 2분위 -1.23%p(65.18→63.96%), 1분위 -24.30%p(71.11→46.81%) 등은 비중이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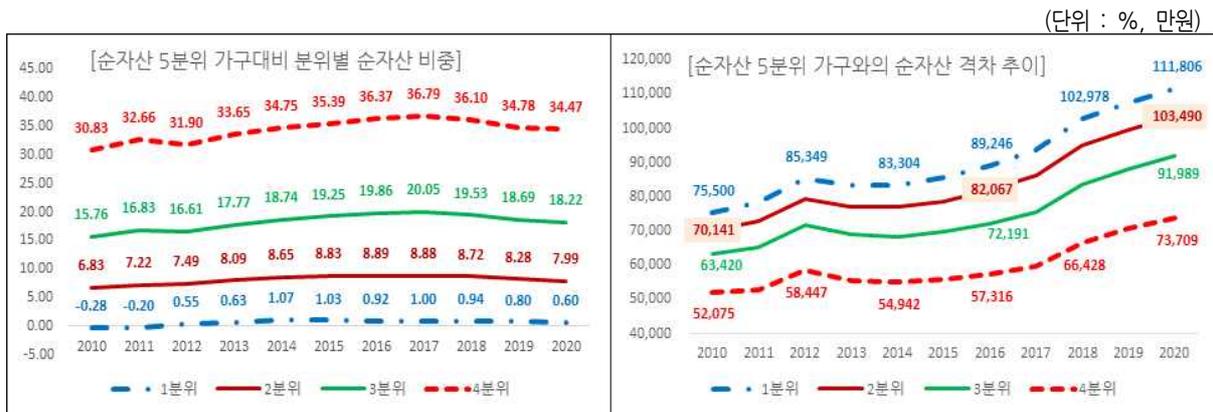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5분위 자산총액은(131,482만원)은 1분위 자산총액(3,579만원)의 36.7배에 달했고, 분석 기간 중 자산 순증액 또한 5분위 가구가 44,599만원으로 1분위 순증액 1,297만원의 34.4배에 달하는 등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였다.

그런데 2020년 기준 순자산 5분위별 순자산액은 5분위(112,481만원), 4분위(38,773만원),

3분위(20,493만원), 2분위(8,992만원), 1분위(675만원) 등으로, 5분위 가구 순자산은 1분위 가구 순자산의 166.6배에 달하는 등 자산 불평등보다 순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한 상태였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의 순자산 순증액은 5분위(37,195만원), 4분위(15,561만원), 3분위(8,626만원), 2분위(3,847만원), 1분위(885만원) 등이었다.

순자산 5분위 가구 대비 분위별 순자산 비중은 1~4분위 가구 모두 2010년과 비교할 때 소폭이나마 상승했는데, 분위별 상승 폭은 1분위 0.88%p(-0.28→0.60%), 2분위 1.16%p(6.83→7.99%), 3분위 2.46%p(15.76→18.22%), 4분위 3.64%p(30.83→34.47%) 등이었다. 1~4분위 가구 집단의 순자산 비중이 상승하긴 했지만, 5분위 가구와의 순자산 격차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여전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5분위와 1분위 가구 간의 순자산 격차는 2010년 75,500만원에서 2020년 111,806만원으로 36,306만원이 늘었으며, 이어 2분위가 33,349만원(70,141→103,490만원), 3분위 28,569만원(63,420→91,989만원), 4분위가 21,634만원(52,075→73,709만원) 등으로 5분위 가구와의 순자산 격차가 늘어났다. 순자산을 적게 보유한 하위 분위일수록 5분위와의 순자산 격차가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22] 순자산 5분위 가구 대비 분위별 순자산 비중 및 순자산 격차 추이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순자산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관련 통계는 2010년부터 제공되고 있지만, 2010년과 2011년 1분위 가구의 순자산은 각 -213만원과 -155만원으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마이너스인 상태였다. 이에 1분위 가구의 순자산이 (+) 상태로 돌아선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산 5분위 배율 및 순자산 5분위 배율을 산출하여 비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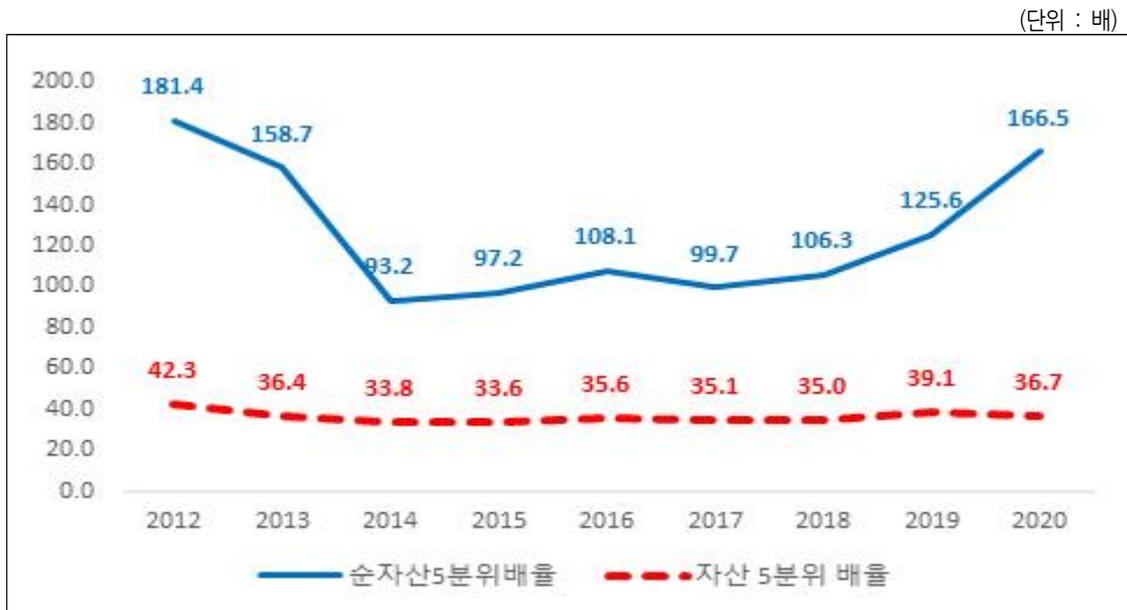
순자산 5분위별 자산 5분위 배율의 경우, 2012년 42.3배에서 2020년 36.7배로 줄어들면서 다소나마 개선되는 모습이었지만, 순자산 5분위 배율의 경우 2012년 181.4배에서 2020년 166.5배로, 기준연도와 비교할 때 낮아지긴 했지만, 2017년 99.7%를 기록한 이후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2020년 166.5배까지 급등세를 보였다.

2020년 기준 자산은 5분위 가구가 1분위 가구보다 36.7배가 많았지만, 순자산은 5분위 가구가 1분위보다 166.5배나 더 많았다. 이는 자산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상태지만,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불평등은 더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순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한 이유로는, 첫째 5분위와 1분위 가구 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 둘째 실물자산 비중과 부채 규모가 높았던 5분위 가구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보유 자산 가치가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림23] 순자산 5분위별 '자산 5분위 배율' vs '순자산 5분위 배율' 추이 비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3) 가구 재무건전성 추이

순자산 5분위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부채와 원리금상환액이 급증했다는 점이였다. 부채 및 원리금 상환액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순자산 5분위별 가구들의 재무 건전성은 어떠한지, 부채상환 여력은 충분한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2020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⁷⁾을 보면, 5분위 가구가 233.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4분위(155.96%), 3분위(142.83%), 1분위(122.39%), 2분위(119.94%)의 순이었다. 5분위 가구의 경우 2010년에도 부채 비율이 227.52%로 매우 높은 상태였는데, 지난 10년간 줄어들이는커녕 6.05%p나 더 상승했는바, 대출 금리상승이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5분위 가구의 유동성이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4분위 가구도 2010년에는 127.61%에서 2020년 155.96%로 28.36%p 상승하면서 재무 건성이 나빠졌다. 2분위와 3분위 가구의 경우 2010년 부채 비율은 각 72.93%와 99.45%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었으나, 이후 급증 추세를 보이며 2분위는 47.01%p(72.93→119.94%), 3분위는 43.38%p(99.45→142.83%)나 상승했는데, 상승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면, 향후 실물자산 가격 하락 시 담보 여력의 악화는 물론 유동성이 급격하게 나빠질 것으로 판단된다.

1분위 부채 비율은 2010년 161.26%로 높은 상태였으나, 2020년 122.39%로 -38.87%p나 하락했지만, 문제는 보유 순자산이 적어 담보력이 취약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소득 기반도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경제 상황 악화 시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표11] 순자산 5분위별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 및 원리금상환액 비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부채 / 처분가능소득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0	161.26	72.93	99.45	127.61	227.52	22.71	14.99	15.65	14.53	16.29
2011	164.59	91.10	114.34	128.89	227.39	24.46	18.38	17.97	16.57	18.03
2012	118.48	91.54	113.06	136.75	227.13	17.85	16.33	16.06	16.43	18.33
2013	129.11	102.51	127.04	137.79	223.37	18.12	17.21	19.58	18.67	20.10
2014	114.33	108.40	130.64	143.85	214.55	21.62	19.60	23.08	21.83	21.84
2015	114.23	108.35	129.51	147.64	217.06	21.94	23.76	23.12	25.42	24.07
2016	113.95	110.31	142.51	147.17	232.16	22.65	22.69	28.54	27.38	27.58
2017	104.04	127.93	130.10	138.95	209.37	21.04	19.53	23.33	21.59	24.72
2018	112.08	116.56	141.80	145.10	222.58	18.78	20.67	24.22	23.11	26.07
2019	106.32	118.61	139.95	150.93	230.55	19.68	20.53	23.75	25.50	28.18

7)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만으로 가계의 부채상환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나라지표'에서 제공되는 2019년 OECD 기준에 의한 주요 국가들의 '가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이 190.6%로 스페인(105.0%), 프랑스(122.1%), 영국(142.1%), 핀란드(148.2%)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았다.

2020	122.39	119.94	142.83	155.96	233.57	23.42	22.34	26.63	22.89	26.07
증감	-38.87	47.01	43.38	28.36	6.05	0.71	7.35	10.97	8.37	9.78
증가율	-24.10	64.46	43.62	22.22	2.66	3.13	49.05	70.08	57.62	60.04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순자산 5분위 가구 집단 모두 상승하면서 소비 여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1분위(23.42%), 2분위(22.34%), 3분위(26.63%), 4분위(22.89%), 5분위(26.07%) 등으로 큰 편차는 없는 상태였다.

[그림24] 순자산 5분위별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 비율 추이

(단위 :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가계 유동성 분석을 위하여 순자산 5분위별 저축가능액을 가지고 부채 규모를 분석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만을 차감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 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를 포함하고 있어, 가계의 여유자금만으로 부채상환에 걸리는 시간을 가늠해보려는 시도다.

순자산 1분위 가구의 경우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 비율은 2012년 645.55%에서 2020년 388.82%로 크게 줄었긴 하지만, 2017년 327.18%를 저점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게 늘었지만, 담보력도 부족하고 소득도 적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 비율 388.82%는 2020년 1분위 가구 저축가능액(747만원)으로 부채(2,903만원)를 상환하려면 약 3.9년이 소요된다는 의미이다.

순자산 2분위나 3분위 가구의 2020년 기준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 비율은 각 316.86%와 350.34%로 기준연도인 2012년 대비 큰 변화는 없었다. 4분위 가구 또한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 비율은 352.15%로 2012년 407.37%에 비해 하락했다.

5분위 가구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 비율은 2012년 554.38%에서 2020년 469.89%로 크게 줄었지만, 2020년 기준 순자산 5분위별 가구 중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상태였다. 가구소득도 높고, 보유 순자산도 많아 현재로서는 담보력도 충분한 상태지만, 2017년 이후 부채 비율이 재상승하고 있고, 향후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표12] 순자산 5분위별 재무 건전성 추이

(단위 : %, %p)

구 분	부채/순자산					금융부채/금융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0	N/A	30.47	23.53	19.97	15.40	209.10	42.41	47.47	46.82	48.50
2011	N/A	37.85	25.76	19.19	16.58	195.19	49.59	51.24	44.72	45.76
2012	398.52	34.01	24.83	20.40	16.37	128.98	48.65	48.68	44.85	38.29
2013	411.55	37.92	28.12	21.10	17.21	133.22	53.53	51.92	42.72	36.36
2014	222.35	39.35	28.81	22.45	16.94	111.74	57.28	55.73	46.61	35.05
2015	238.36	39.46	27.89	22.75	16.84	111.96	58.94	57.79	48.35	35.80
2016	257.86	38.72	29.31	21.84	17.70	112.45	59.32	64.91	49.49	37.62
2017	233.16	47.69	28.24	21.30	17.42	114.24	73.94	64.86	51.56	39.40
2018	256.24	41.67	29.65	21.52	17.28	120.72	67.97	68.94	51.59	42.07
2019	276.39	43.97	30.24	22.47	17.13	117.96	66.39	69.07	56.56	42.32
2020	429.80	45.33	31.17	22.98	16.89	131.75	67.70	67.82	60.90	44.52
증감(%p)	31.28	14.86	7.64	3.01	1.49	-77.35	25.29	20.35	14.08	-3.98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순자산 1분위 가구의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 증감은 2020년에서 2012년도 값을 차감한 것임.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1분위 가구의 부채증가율은 16.31%로 가장 낮았음에도,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순자산 5분위별 가구 집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분위 가구의 2010년과 2011년 순자산은 (-) 상태였기 때문에, 2012년부터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산출했는데, 2012년 398.52%에서 2020년 429.80%로 31.28%p나 상승했다. 2020년 기준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분위(16.89%), 4분위(22.98%p), 3분위(31.17%), 2분위(45.33%) 등으로, 1분위(429.80%)의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매우 높아 담보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또한 1분위 가구가 131.75%로 가장 높았으며, 2분위(67.70%), 3분위(67.82%), 4분위(60.90%) 가구 등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5분위는

44.52%로 가장 낮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분위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0년 209.10%에서 -77.35%p나 하락했다는 점이었다.

순자산 1분위 가구의 경우 부채액도 가장 적고, 분석 기간 중 부채증가율이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보유 자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1분위 가구는 가장 적은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제 상황 악화 시 채무 상환 위험이 커질 것으로,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나가며

가구 특성 중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했던 지난 보고서를 통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재정 적자 상태였으며, 주거비·의료비 등 필수 경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고, 소득 5분위별 교육비 불평등 또한 심각한 상태였다. 현행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소득세제 및 정부 지원금 등) 효과가 매우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대대적인 수술로 저소득 가구의 의료, 주거, 식품 등 기본권적 생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보고서는 순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했는데,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 특히 순자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2017년 이후 ‘순자산 5분위 배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수혜자는 순자산 5분위 가구였다.

2020년 소득 5분위별 경상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5분위 소득 / 1분위 소득)’은 12.03배였다. 2020년 순자산 5분위별 ‘자산 5분위 배율(5분위 자산 / 1분위 자산)’은 36.7배였으며, ‘순자산 5분위 배율(5분위 순자산 / 1분위 순자산)’은 166.5배에 달했다.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특히 순자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순자산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이유는 5분위와 1분위 가구 간의 소득 격차가 꾸준히 늘어났고, 실물자산과 부채가 가장 많았던 5분위 가구의 보유 자산 가치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결국 2016년 이후 주택가격 급상승의 가장 큰 수혜자는 5분위 가구라 할 수 있었다.

둘째,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경상소득은 물론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모두 순자산 5분위 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순자산 5분위별 가구 간 소득 재분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보고서(‘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에서도 현행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소득세제 및 정부 지원금 등)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 순자산 5분위별 소득 변화에서도 소득 재분배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순자산 5분위별 경상소득 증가율은, 5분위 가구가 61.80%(6,541→10,583만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 3분위 57.18%(3,416→5,368만원), 4분위 57.01%(4,454→6,993만원), 2분위 54.47%(2,565→3,961만원), 1분위 43.66%(1,888→2,713만원) 등의 순이었

다.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또한 5분위 가구가 59.61%(5,097→8,135만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 3분위 59.27%(2,808→4,473만원), 2분위 58.08%(2,150→3,399만원), 4분위 57.28%(3,632→5,713만원) 등이었으며,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53.28%(1,548→2,372만원)로 가장 낮았다.

셋째, 교육비 불평등 또한 매우 심각한 상태로 학력별 소득 및 자산 격차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의 불평등이 미래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2020년 기준 순자산 5분위별 가구당 교육비는, 5분위가 5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분위(423만원), 3분위(289만원), 2분위(173만원), 1분위(96만원)의 순으로 순자산이 많을수록 교육비 지출도 많았다. 1인당 교육비 또한 5분위(189만원), 4분위(141만원), 3분위(103만원), 2분위(72만원), 1분위(48만원) 가구 등으로 위계가 분명하게 나타나, 순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교육비 투입량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순자산 분위별 가구주 평균연령이 1분위(57.9세), 2분위(55.6세), 3분위(54.9세), 4분위(55.3세), 5분위(56.7세) 등으로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비슷한 연령대의 학령기 자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학력별 소득 및 자산 격차가 매우 큰 우리 사회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의 자산 불평등이 미래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넷째, 소득원천 중 순자산 5분위 가구의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이 특히 많이 늘어난바, 5분위와 1분위 가구 간 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소득원천 중 노동소득 증가율은 5분위 가구가 49.22%로 가장 높았고, 1분위 가구는 35.65%로 가장 낮았다. 노동소득 순증액도 5분위 가구가 2,064만원(4,194→6,25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1분위 가구는 441만원(1,237→1,678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동일 기간 재산소득 순증액도 5분위 가구가 713만원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이어 4분위(228만원), 3분위(116만원), 2분위(62만원), 1분위(20만원) 등이었다. 결국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이 순자산 5분위와 1분위 가구 간의 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1분위 가구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 상황 악화 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질 것으로,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1분위 가구의 부채증가율은 16.31%로 가장 낮았음에도,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가장 높았다.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12년 398.52%에서 2020년 429.80%로 31.28%p나 상승했고, 2020년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

을 또한 1분위 가구가 131.75%로, 2분위(67.70%), 3분위(67.82%), 4분위(60.90%), 5분위(44.52%) 등과 비교할 때 가장 높았다. 근본 원인은 기본적으로 보유 자산이 너무 적기 때문이었다. 경제 상황 악화 시 1분위 가구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질 것으로,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끝)